



「태풍백서」 발간, 「과학상」 제정 보람

李 台 燮 (1986~87년, 제8대 과기처장관)

1986년 8월27일
취임식을 갖던 날,
우리나라를 강타하며
34명의 인명을 앗아간
A급 태풍 베라호의 재해를 겪고
장기방재대책의 일환으로
「태풍백서」를 발간했고
6·10항쟁 등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망한 젊은 과학도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과학상」 제정을 실현하여
지금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전 일본 간사이지방을 통과한 진도 7.2의 강진으로 산업중심지인 고베시 일대가 순식간에 공포와 폐허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자그만치 5천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안겨다 준 전후 최대의 비극이었다. 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참혹한 현장의 모습은 그 발생지가 세계 초일류 산업기술국임을 자랑하는 일본이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충분했으며,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속에 살고 있다는 우리네 인간이 아직도 대자연의 위력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

자연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쾌적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

국내외의 크고 작은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 취임하던 1986년 그해 여름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8월27일 취임식이 있었던 바로 그 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축하사절단이 도착했다. 이름하여 베라호, 34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무려 3백72억원의 재산피해를 안겨준 A급 태풍이 그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태풍 베라호가 나의 취임을 맞아 준 셈이 됐고, 그 덕에 취임첫날부터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보내야 했다.

2백25개의 태풍자료 분석

대통령을 수행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수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재해예방대책 하나가 아쉬운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재해가 발생하면 매년 사후약방문(藥方文)식의 수습대책에만 급급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인구와 산업시설의 밀집화가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해마다 자연재해의 규모도 대형화되어가는 추세인 점을 감

안할때 보다 적극적인 예방행정의 구현이 절실했다. 다행스럽게 당시 정부에서도 범부처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재해 경감과 안정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방재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내가 기상대에 지시한 것이 「태풍백서」의 발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0년간의 재해중 태풍에 의한 것이 연평균 약 20%를 점하고 있으며 이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앙기상대를 중심으로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 「태풍백서」에는 1904년부터 85년까지 82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총 2백25개의 태풍에 관한 기상자료와 피해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수록하였으며, 또 수록된 통계치 등 각종 자료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태풍에 관한 일반상식과 재해예방요령도 담고 있다. 태풍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각 지역의 해당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발간된 것이다.

태풍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차기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

이 최대 현안이었다. 국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내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기획원 예산실에서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책정된 것이 까닭에 당시에는 으레 국회에서 무사 통과되기만을 빌어야만 될 입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체념하고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과학기술이 무엇인가? 과학기술의 여하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좌우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같은 국가 중책을 맡고 있는 나에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는 그 어떤 번영도 위안도 될 수 없었다. 적어도 과거의 연구개발비 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예결위원들을 한사람씩 접촉하며 끈질긴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른바 예산삭감 기관이라 불리우는 국회를 대상으로 오히려 예산증액을 부탁한다는 것은 도무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구·개발 예산 따내기 '진땀'

동분서주하며 노력한 보람으로 마침내 연구개발비를 늘리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이해와 공감을 가져 준 다수 의원들의 도움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감히 공치사를 하자면 짧으나마 의정활동을 통해 조금씩 쌓아 올린 개인적인 정치적 역량 또한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이라 함은 모름지기 학자적인 소양과 정치가적인 자질을 고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그 분야에 정통한 학자라면 연구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인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책임기간 중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처 장관인 하비비박사는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경제계획과 산업조정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두루 갖춘 분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십여년째 과거처장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장수 장관인 최형섭 전과기처장관의 7년수개월의 기록도 하비비장관의 기록에 비교하면 어렵도 없는 것이다. 간단없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관례인양 잦은 인사개편을 단행하고 그로 인해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우리의 현대사에 비추어 볼 때, 근 20년 가까이 과거처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하비비박사의 존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내가 과거처장관으로 있었던 86년, 87년은 거센 정치적 소용돌이의 연속이었다. 박종철사건이 도화선이 되고 이한열사건이 불을 붙여 전국을 들끓게 한 6·10항쟁이 있었고, 역사적인 6·29선언이 뒤따라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불안과 혼돈의 시대였다. 이런 와중에서



◀86년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원로 과학기술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태섭 前장관.

나는 11개월만에 과기처장관직을 마감해야 했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공지와 소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펼쳐 보이기엔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다.

과학상에 언론부분 신설

재임기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업무가 「과학상」 제정이다. 과학상은 이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해 유망한 젊은 과학도를 발굴·육성하여 이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기 위한 뜻에서 마련된 것이다. 나는 이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권위있는 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2년에 한번씩 기초과학분야에서 두드러진 연구활동을 해 온 인물을 선정하여 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학계의 중의가 의외로 지원금액이 너무 많다는 쪽으로 모여져 결국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언젠가는 그 지원금을 받게 될 당사자들이 먼저 지원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이고 보니 못이기는 척 따를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과학상 제정과 함께 비중을 두고 추진한 것이 과학기술언론의 육성이었다. 수준 높은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과학의 생활화이다. 여기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이라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언론이 앞장서 국민계도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송과 지면을 통해 다각적인 보도와 홍보를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과학이라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론이 자발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의 산파역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언론부문 상도 마련하였다. 또 KIST내에 「과학기술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처를 뒷받침해 주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했다.

21세기 장기계획 발표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고 자부할 만한 것으로 '2천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장기계획'의 발표를 들 수 있다. 이 계획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모든 계획을 모아 책으로 발간한 것으로 실적위주의 단기성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한 것이다. 이것을 후임 과기처장관들이 많이 보완하고 다듬어서 지금의 G7 프로젝트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 계획서를 통해서 나는 늦어도 2001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GNP의 5%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서고 싶다면 선진국의 서열이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나라의 순으로 정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른 봄부터 논밭을 갈고 정성껏 씨를 뿌린 농부가 그 결실을 볼 수 없다면 그 마음은 어떠할까? 재임기간에 추진하여 착실한 준비작업을 마쳤으나 미처 결실까지 지켜볼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몇가지 있다. 기초과학연구센터 설립과 남극기지 건설 등이 그것이다.

기초과학연구센터는 임기내에 정식 발족은 보지 못했지만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놓고 제반준비를 거의 완료시켜 놓았다.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우는 사업은 재임중인 86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혀 책정된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아쉬운대로 예비비를 얻어 추진하였다. 88년 2월 우리나라가 마침내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건설하였을 때 비록 현장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었다. 남극기지진출은 우리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기·기상·지질·광상학 등 기초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자원 개발에도 동참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나의 과학기술처장관 시절은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론 가장 바쁘고 의욕적으로 일에 매달린 보람된 시간이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안정된 정치 상황에서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소신있게 펼쳐 보일 수 없었던 점이다. 알다시피 과학기술정책은 5년 내지는 10년을 설계하는 장기계획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생산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과학자·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최소한 10여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실적이 나 성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위치에서 선행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인도네시아 하비비박사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정치적 변화와 정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관리하여 일관되고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성숙된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정부에서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도 국가경쟁력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고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다름아닌 과학기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㉞